

주요 노동동향

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◆ 2025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0.6% 증가(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)

-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, 서비스업, 광공업,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.6% 증가하였음.
 - －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,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, 광공업,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1.2% 증가하였음.
-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,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, 전자부품, 전기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.8% 증가하였음(전년동월대비 7.1% 증가).
-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, 도소매, 금융·보험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.5% 증가하였음(전년동월대비 0.8% 증가).

◆ 2025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1.5% 증가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8.7% 증가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-2.5%), 신발·가방 등 준내구재(-1.7%)에서 판매가 줄었으나, 통신기기·컴퓨터 등 내구재(13.2%)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.5% 증가하였음(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).
-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(23.3%)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(7.4%)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8.7% 증가하였음(전년동월대비 7.7% 증가)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1.5% 증가하였고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57.5% 증가하였음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		연간			분기				분기				월		
		2022	2023	2024	2023				2024				2024 2월	2025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	1월p	2월p
생산	전 산업	4.7	1.1	1.5	0.1	0.9	1.2	0.4	0.4	0.0	-0.4	0.4	1.1	-3.0(-3.7)	0.6(1.2)
	광공업	1.0	-2.6	4.1	0.6	2.8	1.4	1.8	-0.8	1.8	-0.5	1.5	3.1	-2.8(-4.7)	1.0(7.0)
	제조업	1.0	-2.6	4.2	0.6	3.0	1.4	1.9	-0.8	1.8	-0.8	2.1	3.3	-3.0(-4.7)	0.8(7.1)
	건설업	2.6	7.8	-4.7	3.4	-0.4	1.9	-4.2	7.7	-8.2	-3.8	-5.1	-5.4	-4.6(-27.4)	1.5(-21.0)
	서비스업	7.0	3.4	1.1	0.7	0.5	1.0	0.3	0.3	0.0	-0.3	0.7	0.9	-0.9(-0.9)	0.5(0.8)
소비	소비재 판매	-0.3	-1.3	-2.1	-0.7	0.4	-1.3	0.8	-2.2	-0.3	0.7	-0.4	-3.5	-0.7(0.0)	1.5(-2.3)
투자	설비투자	2.6	-4.8	2.9	-9.0	1.5	-3.8	3.5	-1.5	-1.4	10.2	-1.8	8.9	-15.7(-5.1)	18.7(7.7)
물가		5.1	3.6	2.3	1.1	0.6	1.0	0.7	0.7	0.3	0.4	0.2	0.1	0.3(2.0)	0.2(2.1)

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
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를 포괄함.

3)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
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4년 3월, 2025년 2월, 2025년 3월 기준임.

5) p는 잠정치임.

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
7) (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◆ 202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2% 상승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2%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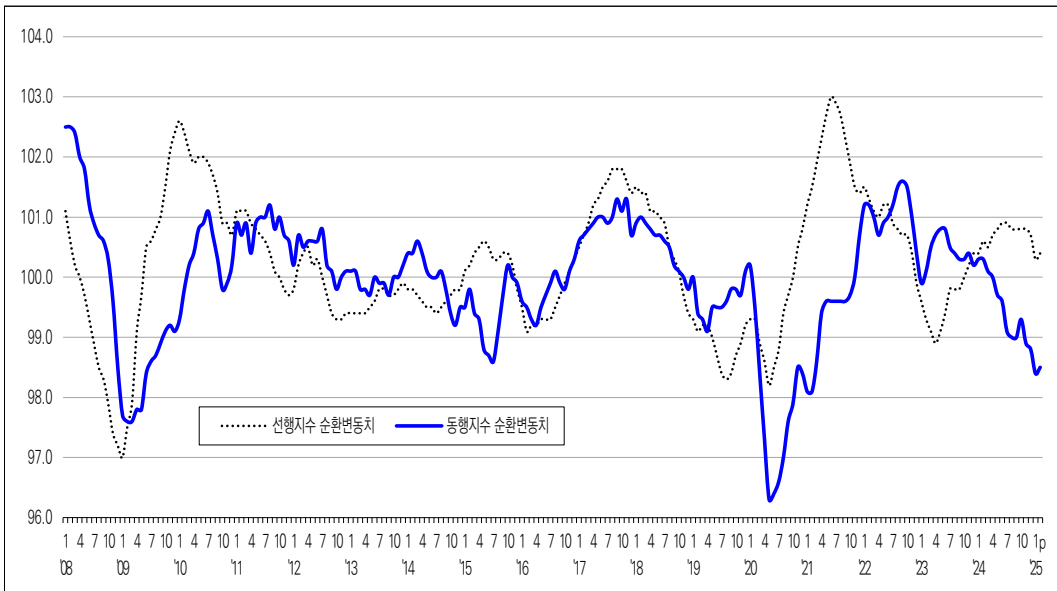
○ 202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.29(2020=100)로 전월대비 0.2% 상승하였음(전년동월대비 2.1% 상승).

- 전월대비 식료품·비주류음료(0.6%), 교육(1.1%), 음식·숙박(0.4%), 기타 상품·서비스(0.4%), 오락·문화(0.1%)는 상승, 보건, 의류·신발, 주류·담배, 통신은 변동 없고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-0.3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-0.2%), 교통(-0.4%)은 하락하였음.
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.5% 상승하였고,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.1% 하락하여 전월대비 0.2% 상승하였음.

◆ 2025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3% 증가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3% 증가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하였음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하였음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 : 1) p는 잠정치임.
 2)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=1000이 기준.
 자료 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고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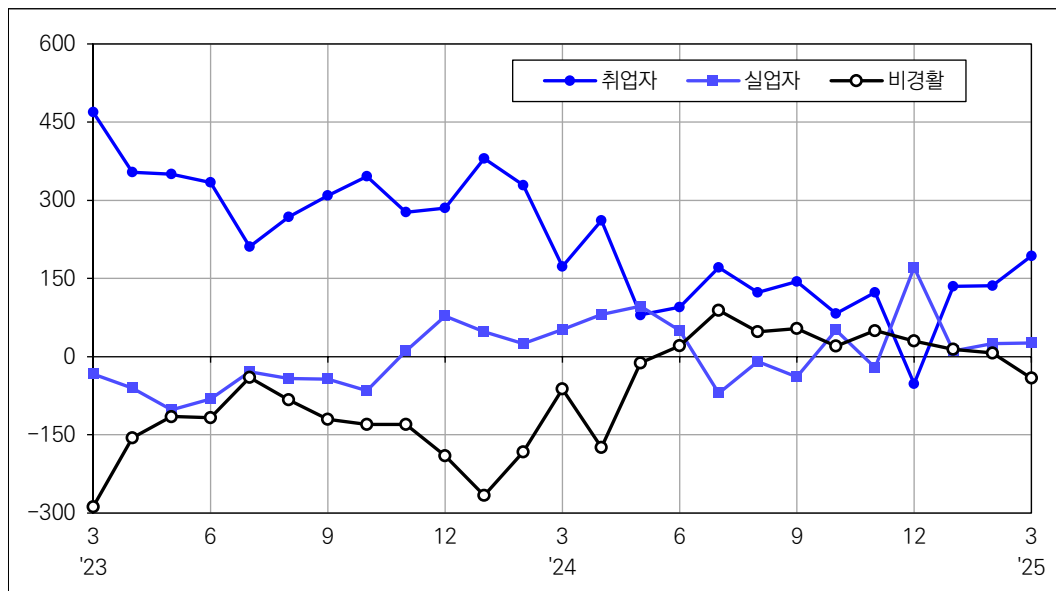
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,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 수준 유지

○ 2025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증가(전월대비¹⁾ 2천 명 감소)함.

- (연령별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와 4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
- (제조업·건설업) 전년동월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됨.
- (서비스업)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은 감소폭이 축소됐고, 금융·보험 및 공공행정은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전문·과학·기술은 증가폭이 축소됨.
- (종사상 지위별)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및 자영자 증가폭이 확대됨.
- (실업·비경제활동인구)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만 6천 명 증가(전월대비 4만 7천 명 증가)했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 명 감소(전월대비 3만 1천 명 감소)함.
- (확장실업률)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8.7%로 전월대비 0.2%p 증가함.

[그림 1] 원계열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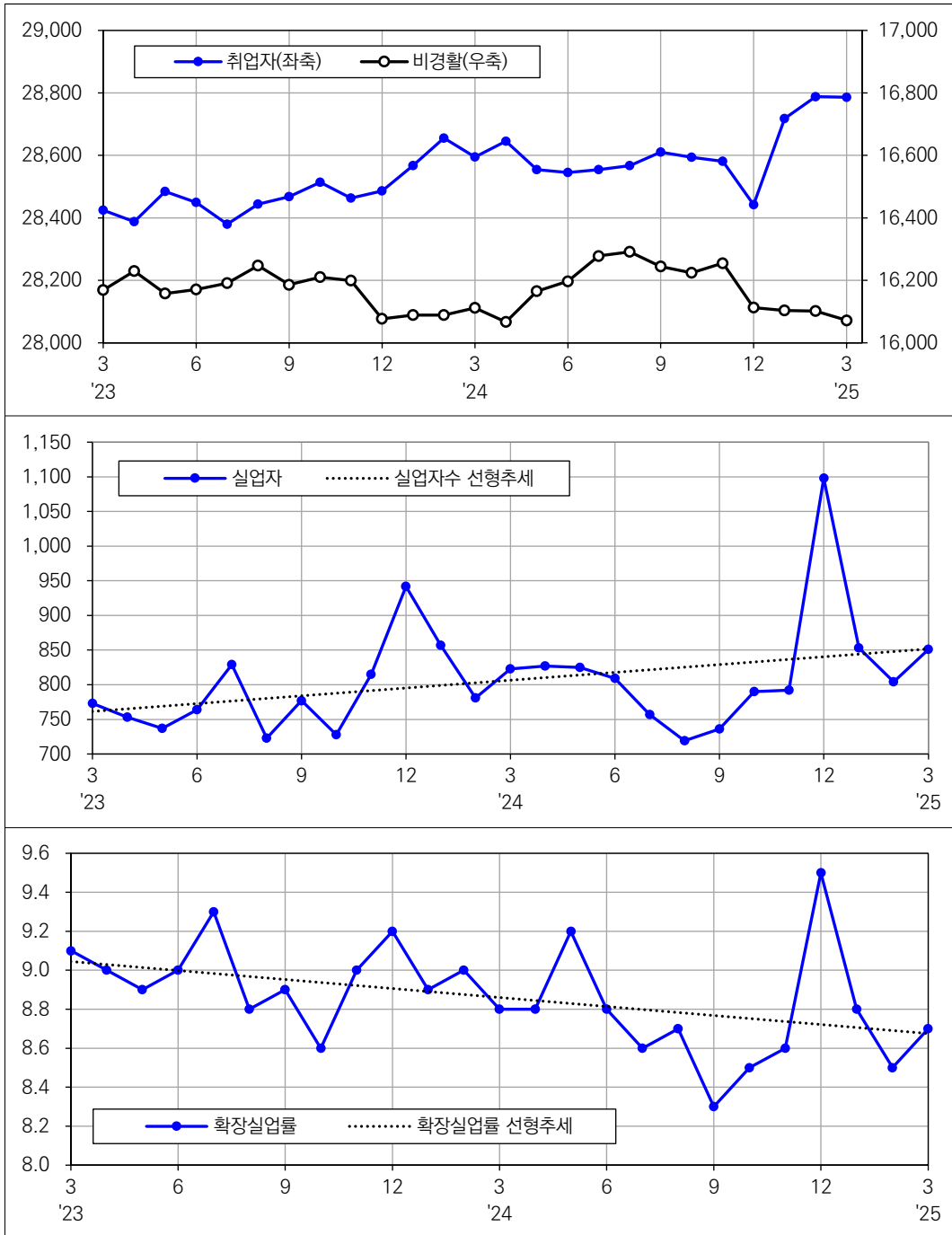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2]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(상), 실업자 수(중) 및 확장실업률(하) 변화

(단위 : 천 명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연령별)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와 4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5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확대됨.

- 2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사업시설관리지원, 운수창고 및 숙박음식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반면 전문·과학·기술 및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40대 취업자 수는 금융·보험, 공공행정 및 예술·스포츠·여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교육서비스 및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및 숙박음식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농림어업에서는 감소 전환됐고, 제조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- 실업자는 2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에서 감소로 전환됨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(단위 : 천 명, %p, 전년동월대비, (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	15~19세				20대				30대			
	1월	2월	3월	(전월비)	1월	2월	3월	(전월비)	1월	2월	3월	(전월비)
취업자	-13	-7	-5	(5)	-205	-228	-202	(-8)	98	116	109	(16)
실업자	-5	-9	-5	(3)	-11	15	31	(9)	-11	-15	-16	(-2)
비경황	8	10	6	(-8)	6	5	-33	(-22)	-45	-52	-39	(-7)
실업률	-2.5	-5.2	-2.7	(2.0)	0.1	0.8	1.1	(0.2)	-0.2	-0.3	-0.3	(-0.1)
고용률	-0.6	-0.3	-0.2	(0.2)	-1.3	-1.8	-1.3	(0.1)	0.9	1.1	1.0	(0.1)
	40대				50대				60세 이상			
	1월	2월	3월	(전월비)	1월	2월	3월	(전월비)	1월	2월	3월	(전월비)
취업자	-71	-78	-49	(23)	-14	-8	-26	(-42)	340	342	365	(23)
실업자	-9	8	-1	(-2)	-8	1	-9	(15)	55	26	26	(6)
비경황	-77	-84	-101	(-34)	32	6	23	(24)	91	123	104	(14)
실업률	-0.2	0.2	0.0	(-0.1)	-0.1	0.0	-0.1	(0.2)	0.4	0.2	0.2	(0.0)
고용률	0.6	0.6	0.9	(0.5)	-0.3	-0.1	-0.2	(-0.4)	1.0	0.9	0.9	(0.0)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산업별)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금융·보험, 공공행정, 보건복지 및 예술·스포츠·여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도소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반면 농림어업,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전문·과학·기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

- 전월대비 취업자는 도소매업, 운수창고, 금융·보험,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예술·스포츠·여가 등에서 증가했고, 농림어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·기술 및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함.

〈표 2〉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
농림어업	7	-19	-79	-9	-46	-56
광업	5	3	3	-1	0	-1
제조업	-56	-74	-112	13	-9	-16
전기·가스·증기	-2	-9	-1	6	-2	3
수도·원료재생	3	7	14	-1	6	8
건설업	-169	-167	-185	-16	-10	-26
도매 및 소매업	-91	-65	-26	8	19	36
운수 및 창고업	-4	-8	5	-11	2	23
숙박 및 음식점업	27	56	56	1	31	10
정보통신업	81	65	61	22	17	-9
금융 및 보험업	31	29	65	2	2	30
부동산업	-4	-5	-8	-14	0	7
전문·과학·기술	98	80	37	9	-8	-15
사업시설관리지원	-29	-74	-24	1	-13	22
공공행정·사회보장	33	38	87	65	16	6
교육서비스업	63	34	30	1	-30	-7
보건 및 사회복지	119	192	212	180	154	-52
예술·스포츠·여가	5	9	29	15	-20	16
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	6	32	34	9	15	6
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	15	17	1	-3	-1	-8
국제 및 외국기관	-5	-5	-7	0	0	-1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(종사상 지위별) 3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및 자영자 증가폭이 확대됨.

- 상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,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 숙박음식 및 전문·과학·기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- 임시직은 도소매업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제조업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일용직은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됐고,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
- 자영자는 건설업, 도소매업, 운수창고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됐고, 제조업 및 숙박음식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농림어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무급가족종사자는 농림어업에서 감소로 전환됐고,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
상용직	224	233	234	14	42	31
임시직	72	36	126	209	137	-8
일용직	-116	-92	-100	-8	-8	8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고용주)	-21	-26	-29	-13	-3	-21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자영자)	-7	13	28	-15	-6	21
무급가족종사자	-18	-27	-65	7	-25	2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상용직			임시직			일용직		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	
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	1월	2월	3월
농림어업	5	6	4	-5	-3	-4	0	4	-5	3	6	2	-17	-38	-57
제조업	5	-30	-72	-56	-71	-51	-15	-15	-10	0	7	-6	7	21	25
건설업	-101	-80	-60	-10	-21	-53	-56	-55	-68	7	6	6	-5	-14	-6
도소매	-48	-48	-45	27	41	63	-1	-4	-9	-28	-28	-15	-30	-15	-8
운수창고	25	27	29	5	0	-2	3	-1	6	-10	-10	-12	-25	-20	-15
숙박음식	47	72	44	40	10	25	-35	-7	-5	-7	-2	4	2	2	10
정보통신	75	66	62	-11	-10	-14	0	-1	2	2	0	1	16	10	11
금융보험	35	32	50	-2	0	13	0	0	0	-2	-2	-2	-1	-2	4
부동산	10	15	6	-11	-10	-6	-4	-2	-1	4	-1	-3	2	-2	1
전문과학기술	68	54	18	8	7	-4	1	-2	-1	-7	-5	-6	26	24	28
사업관리지원	-14	-24	-9	-2	-33	-18	-14	-19	-6	-1	-10	-7	3	10	13
공공행정	26	29	67	7	10	22	1	-1	-3	0	0	0	0	0	0
교육서비스	30	12	12	9	6	7	-4	-6	-4	4	6	-1	24	21	16
보건복지	56	95	81	80	113	138	-7	-8	0	-6	-6	-5	-4	-2	-2
예술스포츠	8	1	10	-14	-11	6	6	4	-2	6	5	5	-1	13	12
협회단체	9	22	34	-13	-7	-4	4	11	5	13	8	9	-6	1	-6
가구 내 고용	-1	-3	-2	15	13	7	4	8	-2	0	0	0	-3	-1	-3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실업·비경황) 3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증가폭을 유지함.

- 연령별로 15~29세는 증가폭이 확대됐고, 30대는 감소폭이 축소됨.
- 업종별로 운수창고는 증가로 전환됐고,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됨.
-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'쉬었음'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 여성은 '통학'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'취업준비'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

〈표 5〉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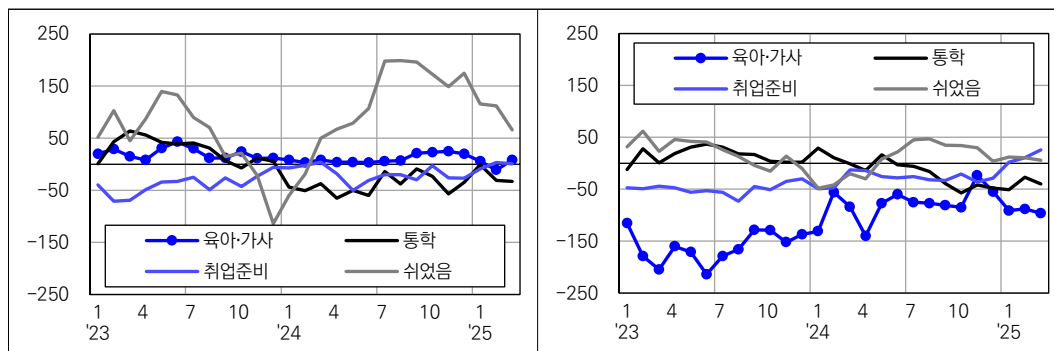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전체		15~29세		30대		40대		50대		60세 이상	
	2월	3월	2월	3월	2월	3월	2월	3월	2월	3월	2월	3월
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	26	25	23	32	-24	-13	-3	-9	-1	-10	32	25
제조업	-13	-9	-1	5	-6	-8	2	1	-4	-3	-3	-4
건설업	14	-1	-2	-1	-3	-9	-1	-1	12	2	7	7
도매 및 소매업	4	3	7	-4	-6	5	6	4	-1	0	-1	-1
운수 및 창고업	-3	9	5	6	1	2	-5	-1	-4	-2	0	5
숙박 및 음식점업	9	16	12	21	-4	-10	-4	0	0	-2	4	7
정보통신업	9	9	4	0	-1	7	3	0	1	-1	2	2
금융 및 보험업	6	4	3	4	-1	-2	2	-1	2	2	1	1
전문·과학·기술	17	22	7	12	4	7	5	3	-1	-1	3	1
사업시설관리지원	17	7	9	5	5	6	1	-4	7	1	-4	-2
공공행정·사회보장	-5	-6	-3	-3	-3	-3	2	1	-5	-4	3	2
교육서비스업	-5	6	4	5	-4	2	-3	-3	0	1	-2	2
보건 및 사회복지	-6	-17	-10	-10	-5	-6	-4	-7	-6	-1	20	7
예술·스포츠·여가	-3	1	-3	-1	-5	-4	0	2	0	2	5	2
협회·단체	-6	-14	-5	-4	-2	-2	-1	-3	1	-4	1	-1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[그림 3] 성별(좌 : 남성, 우 : 여성)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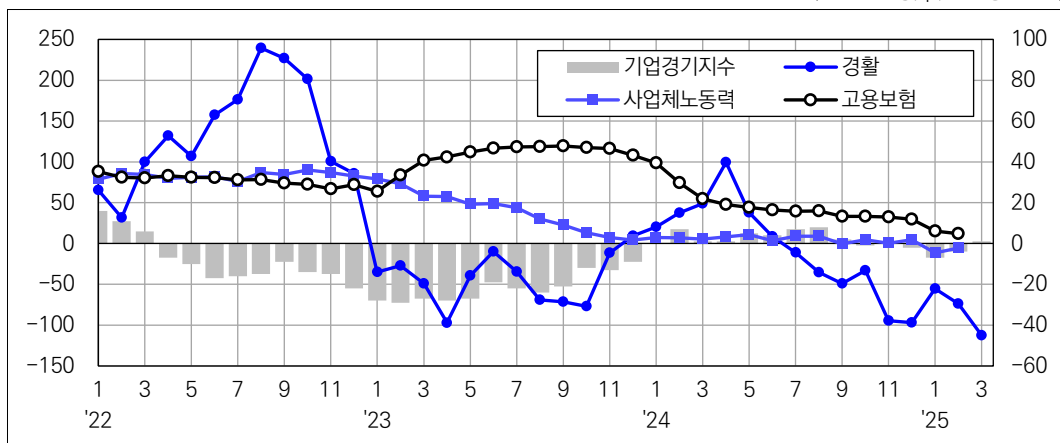
◆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,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

○ 3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.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6천 명 감소함.

-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됐고,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.
- 기업경기지수는 78로 전년동월 수준임.

[그림 4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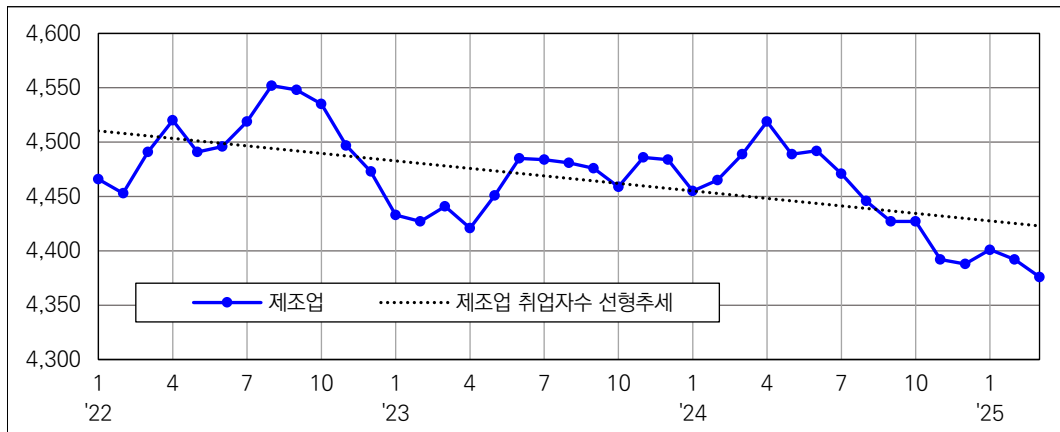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5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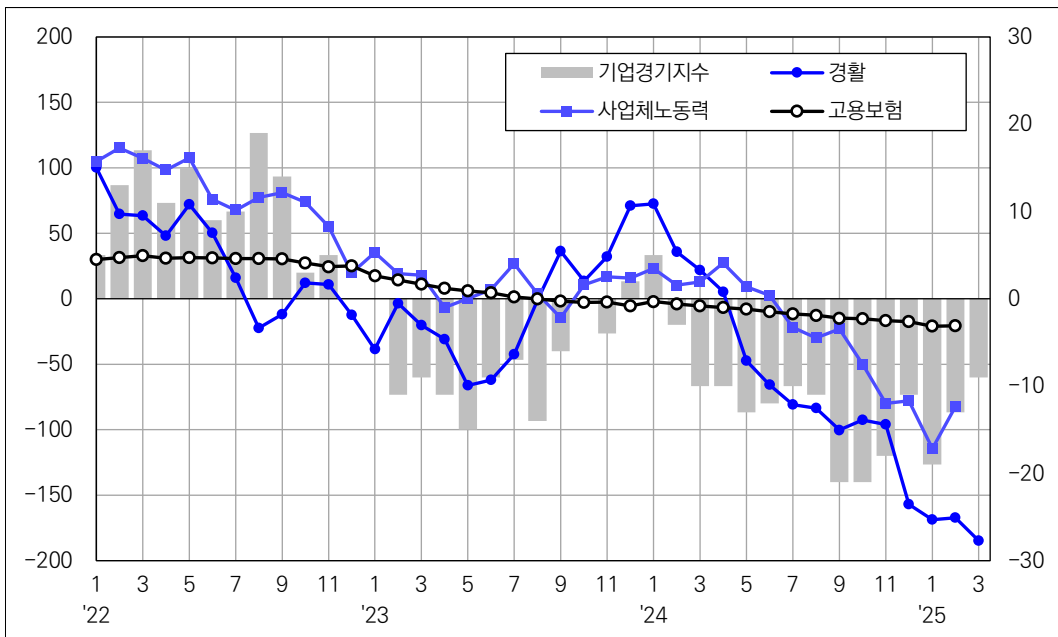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8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.

-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됐고,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.
- 기업경기지수 감소폭은 축소됨.

[그림 6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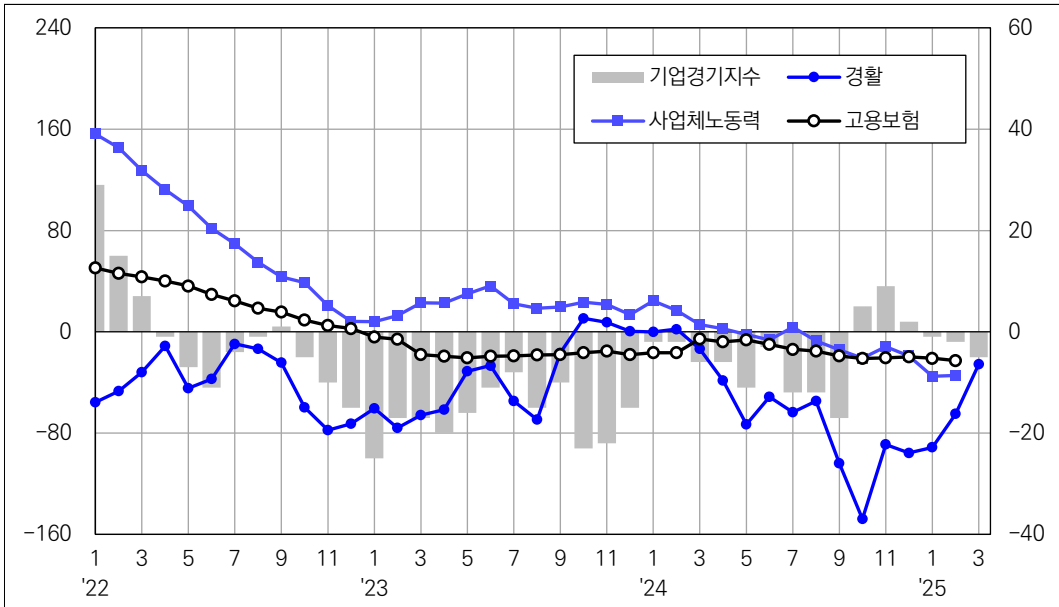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○ 3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6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.

- (도소매)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.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확대됨.
- (금융보험)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확대된 반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축소됨. 생산 지수는 증가폭이 확대됨.
- (전문과학기술)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그 외 고용 지표는 증가폭을 유지함.
- (사업관리지원)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됐고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기업경기지수는 감소로 전환됨.
- (공공행정)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

[그림 7]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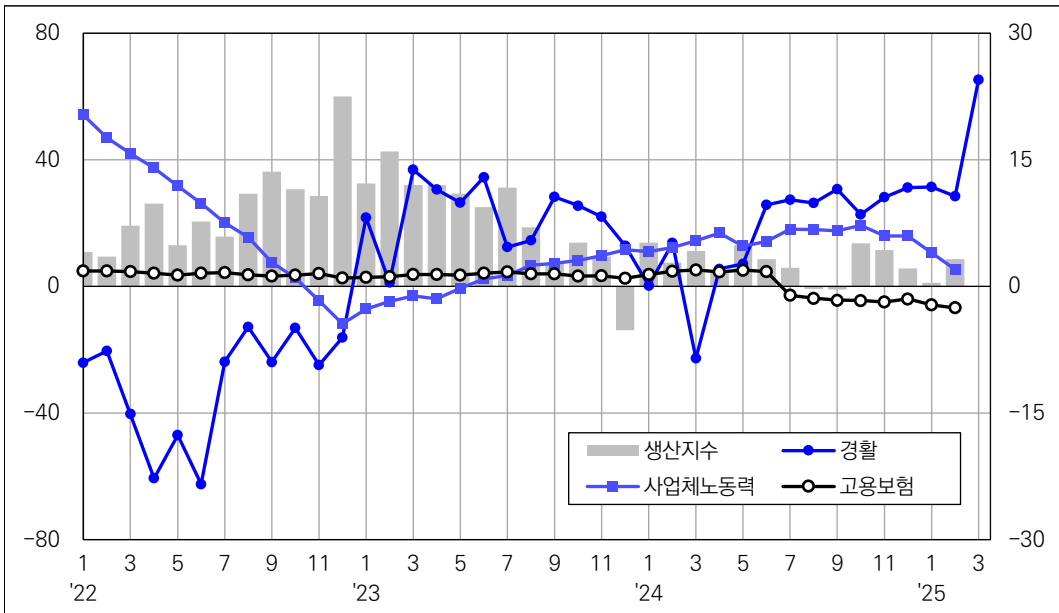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8]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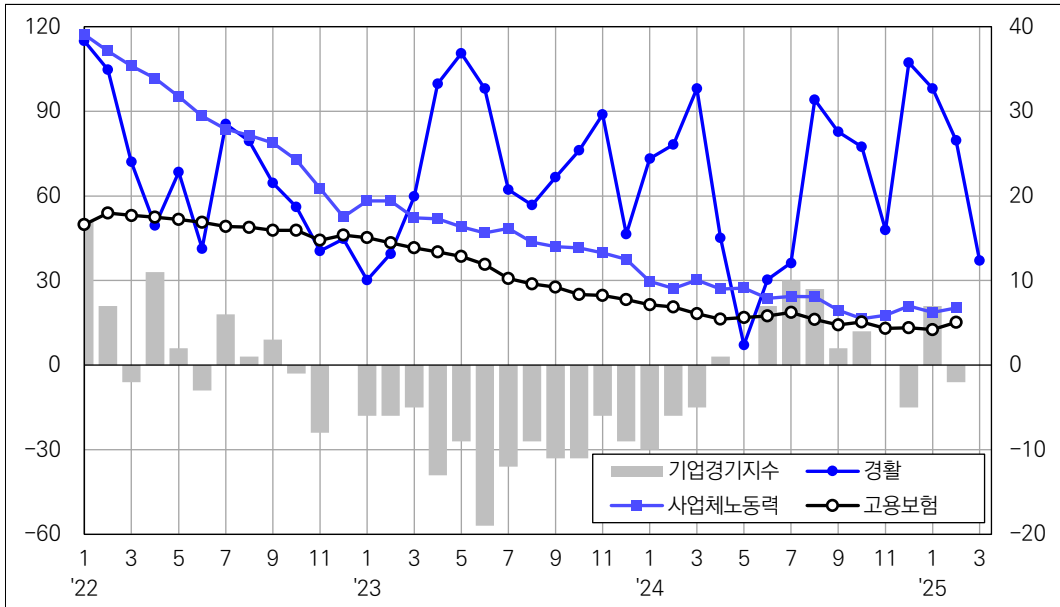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9]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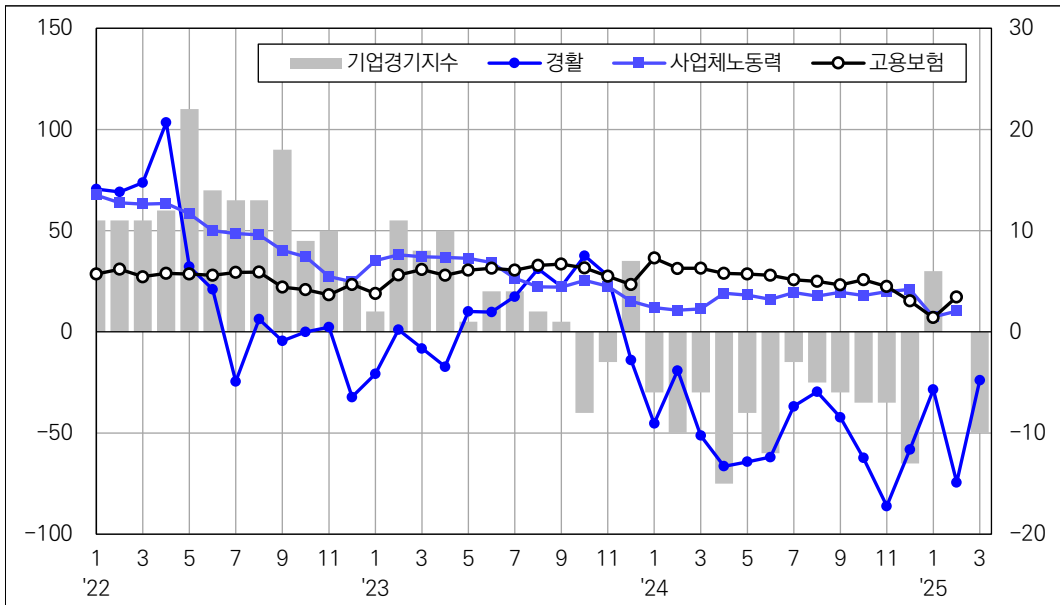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10]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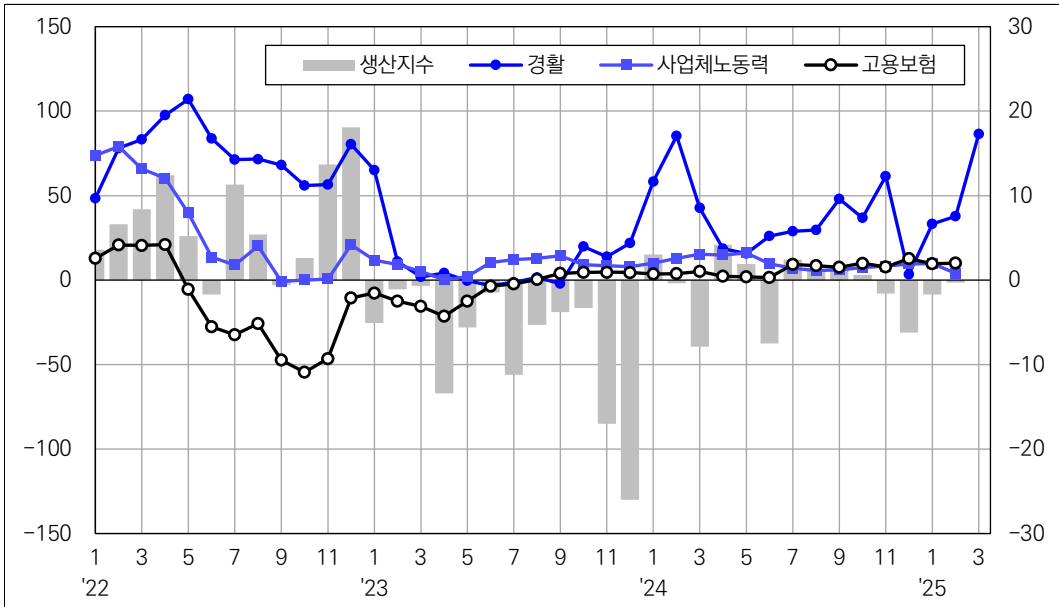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1]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전산업생산지수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◆ 2025년 1월 명목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.8% 증가

○ 2025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96만 7천 원(15.8% 상승)이었음.

- 2025년 1월 상용근로자의 임금(528만 4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15.9%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(175만 원)은 전년동월대비 4.0% 감소하였음.
-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(80.6% 상승)가 증가한 데 기인함. 이는 2024년에는 설 명절이 2월에 있었던 반면 2025년에는 1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지급된 영향이 큼.
-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광업(-2.7%)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 특히 교육서비스업(235.7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26.9%), 운수 및 창고업(107.8%), 제조업(90.4%) 등에서 증가폭이 컸음.

※ 초과급여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

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
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.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(-9.3%), 정보통신업(-7.0%),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-6.5%), 건설업(-1.7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-0.9%)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였음.
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데는 건설업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축소로 인한 구성효과와 근로시간의 감소 영향임.

◆ 2025년 1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.3% 증가

○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.0)를 고려한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명목임금의 증가와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.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플러스(+)를 유지하고 있음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2024 1월	2025 1월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	3,527 (1.1)	3,689 (4.6)	3,869 (4.9)	3,966 (2.5)	4,079 (2.9)	4,289 (-8.6)	4,967 (15.8)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719 (0.4)	3,893 (4.7)	4,095 (5.2)	4,211 (2.8)	4,338 (3.0)	4,559 (-9.0)	5,284 (15.9)
	정액급여	3,077 (2.2)	3,181 (3.4)	3,319 (4.3)	3,444 (3.8)	3,555 (3.2)	3,602 (3.4)	3,725 (3.4)
	초과급여	200 (-0.9)	208 (3.7)	220 (5.7)	227 (3.3)	240 (5.8)	224 (9.2)	238 (6.0)
	특별급여	441 (-9.9)	504 (14.3)	556 (10.4)	540 (-2.9)	542 (0.4)	732 (-44.5)	1,322 (80.6)
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		1,636 (7.8)	1,700 (3.9)	1,747 (2.8)	1,785 (2.2)	1,809 (1.4)	1,824 (2.8)	1,750 (-4.0)
소비자물가지수		100.0 (0.5)	102.5 (2.5)	107.7 (5.1)	111.6 (3.6)	114.2 (2.3)	113.2 (2.8)	115.7 (2.2)
실질임금증가율		0.5	2.0	-0.2	-1.1	0.5	-11.1	13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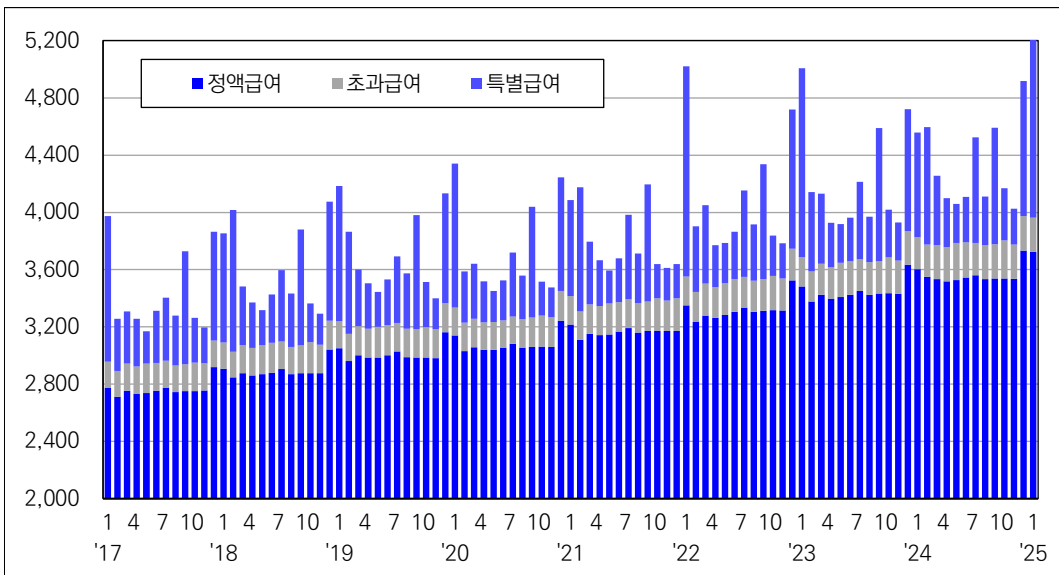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[그림 1]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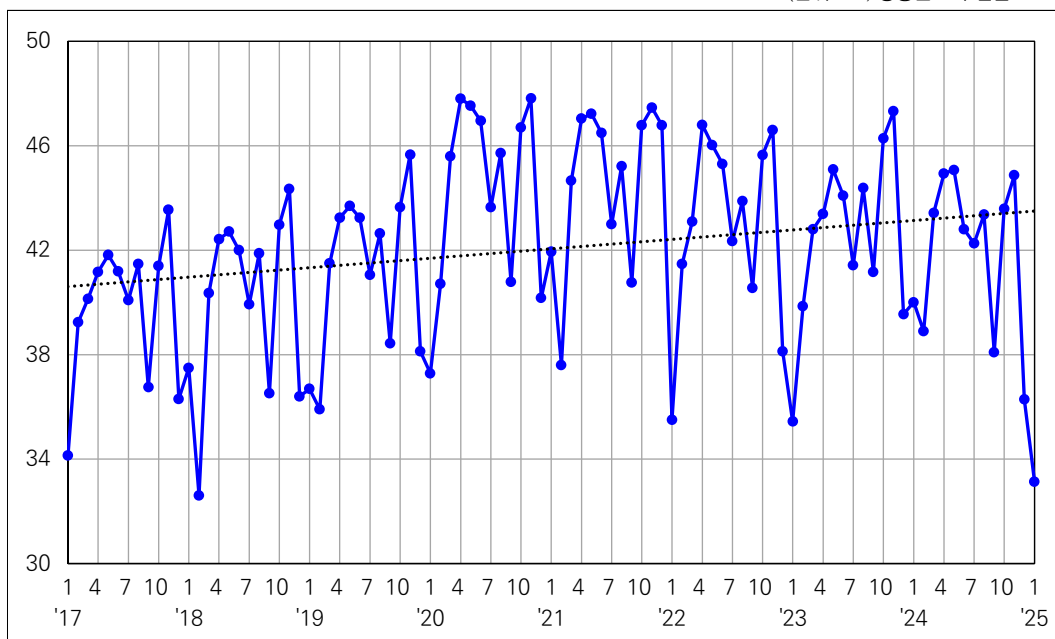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 : %, 상용근로자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

◆ 2025년 1월 중소·대규모 사업체 모두 큰 폭으로 임금 증가

○ 2025년 1월 중소기업(상용근로자 1~299인, 410만 6천 원) 사업체와 대규모(상용근로자 300인 이상, 914만 원)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1.5%, 25.9% 증가하였음.

-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중소·대규모 사업체 각각 전년동월대비 11.7%, 25.9% 증가하였음.
- 중소기업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(512.0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250.2%), 운수 및 창고업(150.4%), 숙박 및 음식점업(132.9%), 제조업(125.5%) 등으로 나타남.
-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342.1%),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119.2%), 제조업(82.4%)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반면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-76.9%)과 부동산업(-1.4%)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중소기업(-6.2%)에서는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(18.9%)에서는 증가하였음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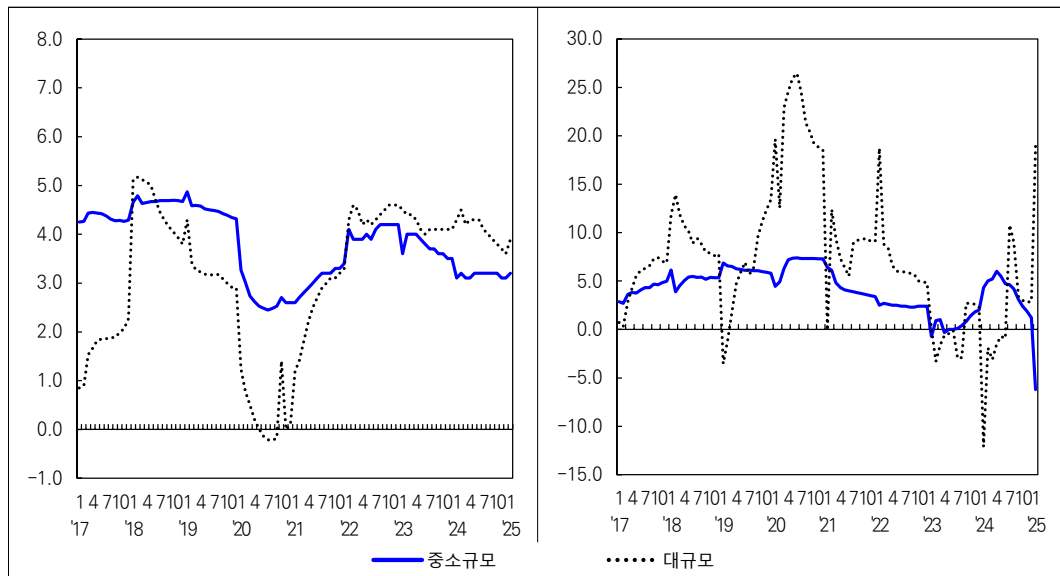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원, %)

		2022	2023	2024	2024 1월	2025 1월
중소 규모	소 계	3,462 (4.4)	3,537 (2.2)	3,479 (3.0)	3,682 (-4.8)	4,106 (11.5)
	상용임금총액	3,675 (4.7)	3,767 (2.5)	201 (3.2)	3,919 (-5.2)	4,378 (11.7)
	정액급여	3,139 (4.2)	3,249 (3.5)	663 (3.1)	3,370 (3.1)	3,479 (3.2)
	초과급여	186 (5.7)	187 (0.8)	1,731 (5.6)	184 (10.2)	194 (5.4)
	특별급여	350 (8.7)	331 (-5.3)	7,318 (2.6)	365 (-47.7)	705 (93.4)
	임시일용임금총액	1,711 (2.4)	1,746 (2.0)	7,498 (1.2)	1,795 (4.3)	1,684 (-6.2)
대규모	소 계	5,922 (6.1)	6,071 (2.5)	4,873 (2.5)	7,259 (-17.2)	9,140 (25.9)
	상용임금총액	6,049 (6.4)	6,212 (2.7)	418 (2.4)	7,449 (-17.3)	9,374 (25.9)
	정액급여	4,155 (4.6)	4,325 (4.1)	2,207 (3.6)	4,653 (4.3)	4,835 (3.9)
	초과급여	377 (5.5)	406 (7.6)	2,583 (6.1)	405 (6.7)	433 (7.1)
	특별급여	1,516 (11.8)	1,481 (-2.3)	3,642 (-2.0)	2,391 (-42.6)	4,106 (71.7)
	임시일용임금총액	2,321 (4.8)	2,375 (2.3)	3,887 (2.9)	2,254 (-12.1)	2,681 (18.9)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3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
(단위: %)

주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5년 1월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

○ 2025년 1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(22.9%), 금융 및 보험업(20.7%), 운수 및 창고업(18.0%) 순이었음.

- － 1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(1,049만 4천 원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870만 2천 원)이었고,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233만 8천 원)이었음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: 천 원, %)

	2022	2023	2024	2024	2025
				1월	1월
전 산업	3,869 (4.9)	3,966 (2.5)	4,079 (2.9)	4,289 (-8.6)	4,967 (15.8)
광업	4,608 (4.4)	4,636 (0.6)	4,900 (5.7)	5,416 (2.5)	5,580 (3.0)
제조업	4,484 (5.8)	4,633 (3.3)	4,755 (2.6)	5,262 (-15.9)	6,468 (22.9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6,907 (2.3)	7,188 (4.1)	7,687 (6.9)	7,559 (19.0)	8,702 (15.1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4,168 (1.8)	4,297 (3.1)	4,431 (3.1)	4,376 (-4.4)	4,931 (12.7)
건설업	3,229 (4.0)	3,359 (4.0)	3,455 (2.9)	3,587 (-1.2)	3,992 (11.3)
도매 및 소매업	3,773 (6.3)	3,921 (3.9)	4,031 (2.8)	4,191 (-5.0)	4,522 (7.9)
운수 및 창고업	4,040 (6.5)	4,185 (3.6)	4,326 (3.4)	4,160 (-5.8)	4,908 (18.0)
숙박 및 음식점업	2,004 (5.2)	2,097 (4.7)	2,134 (1.8)	2,216 (0.6)	2,338 (5.5)
정보통신업	4,999 (4.2)	5,120 (2.4)	5,338 (4.2)	5,797 (-2.4)	6,733 (16.1)
금융 및 보험업	7,324 (5.2)	7,338 (0.2)	7,443 (1.4)	8,691 (-14.8)	10,494 (20.7)
부동산업	3,086 (4.5)	3,117 (1.0)	3,165 (1.5)	3,295 (-1.5)	3,457 (4.9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5,376 (5.3)	5,464 (1.6)	5,646 (3.3)	5,522 (-7.6)	6,365 (15.3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2,584 (3.7)	2,687 (4.0)	2,787 (3.7)	2,818 (-0.4)	3,123 (10.8)
교육서비스업	3,435 (2.4)	3,508 (2.1)	3,602 (2.7)	3,805 (-8.7)	4,441 (16.7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3,122 (3.6)	3,132 (0.3)	3,218 (2.7)	3,222 (-4.5)	3,636 (12.8)
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3,077 (2.8)	3,058 (-0.6)	3,111 (1.7)	3,364 (-6.2)	3,775 (12.2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2,832 (4.9)	3,009 (6.2)	3,126 (3.9)	3,097 (-7.2)	3,545 (14.5)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5년 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4.4시간 감소(근로일수 4일 감소)

○ 2025년 1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0.6시간(24.4시간 감소)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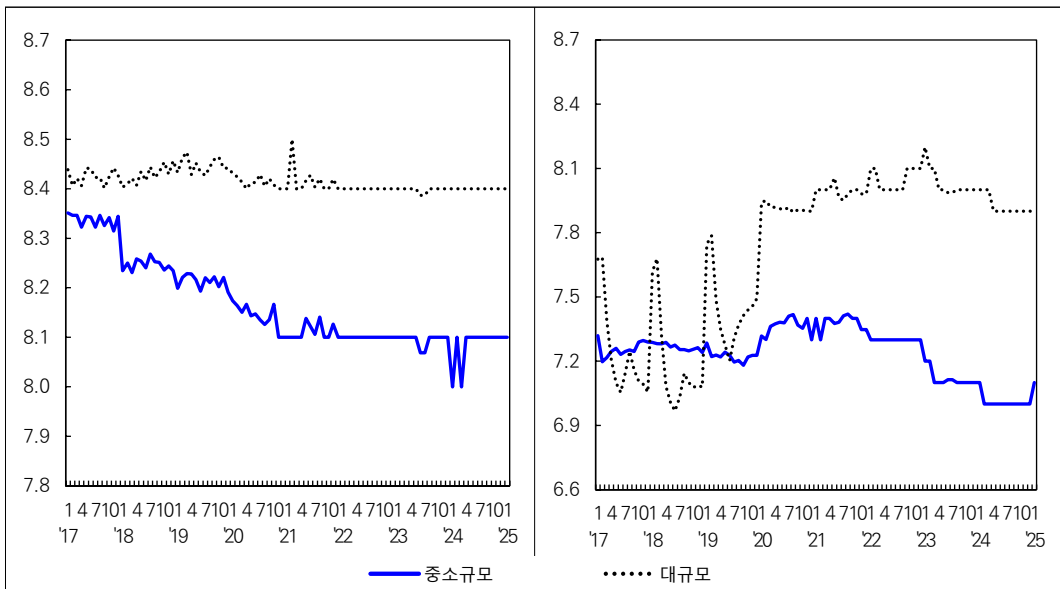
-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(146.4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26.8시간 감소하였고,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(81.7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8.3시간 감소하였음.
-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, 월력상 근로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이 컸음. 특히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-17.8%), 금융 및 보험업(-17.7%), 건설업(-17.3%), 제조업(-16.4%) 등에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음.

◆ 2025년 1월 중소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

○ 2025년 1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(139.9시간)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(144.1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4.0시간, 26.0시간 감소하였음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시간/일)



주 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표 4〉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시간, %)

		2022	2023	2024	2024 1월	2025 1월
중소 규모	전체 근로시간	158.3(-1.2)	155.3(-1.9)	153.9(-0.9)	163.9(7.1)	139.9(-14.6)
	상용 총근로시간	165.9(-1.1)	164.0(-1.1)	163.0(-0.6)	173.5(7.9)	146.7(-15.4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8.2(-1.2)	156.7(-0.9)	155.6(-0.7)	166.4(7.9)	139.5(-16.2)
	상용 초과근로시간	7.7(0.0)	7.3(-5.2)	7.4(1.4)	7.1(7.6)	7.2(1.4)
	임시일용 근로시간	96.4(-1.0)	88.2(-8.5)	84.3(-4.4)	87.7(-1.7)	79.8(-9.0)
대규모	전체 근로시간	160.4(-1.2)	160.5(0.1)	159.4(-0.7)	170.1(8.0)	144.1(-15.3)
	상용 총근로시간	161.7(-1.0)	162.1(0.2)	161.3(-0.5)	171.9(8.1)	145.4(-15.4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0.6(-1.1)	150.9(0.2)	149.8(-0.7)	161.0(8.6)	134.1(-16.7)
	상용 초과근로시간	11.0(-0.9)	11.2(1.8)	11.4(1.8)	10.9(0.9)	11.2(2.8)
	임시일용 근로시간	125.0(-2.3)	117.5(-5.9)	111.9(-4.7)	123.6(3.4)	109.4(-11.5)

주 :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5년 1월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

○ 2025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(-17.7%), 교육서비스업(-16.7%), 제조업(-16.3%) 등으로 나타남.

—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(155.1시간), 부동산업(154.0시간), 제조업(151.8시간) 등이었고,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(117.0 시간)이었음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 : 시간, %)

	2022	2023	2024	2024	2025
				1월	1월
전 산업	158.7(-1.2)	156.2(-1.6)	154.9(-0.8)	165.0(7.3)	140.6(-14.8)
광업	174.8(-2.8)	168.5(-3.6)	169.9(0.8)	175.1(6.4)	152.6(-12.8)
제조업	171.1(-1.4)	170.5(-0.4)	169.7(-0.5)	181.3(8.9)	151.8(-16.3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158.6(-1.9)	160.0(0.9)	156.6(-2.1)	156.1(-3.2)	153.0(-2.0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174.4(-1.4)	170.0(-2.5)	169.2(-0.5)	179.1(5.8)	155.1(-13.4)
건설업	134.3(-1.2)	128.7(-4.2)	127.7(-0.8)	135.6(6.4)	122.3(-9.8)
도매 및 소매업	162.3(-0.9)	159.2(-1.9)	157.8(-0.9)	168.3(6.9)	142.3(-15.4)
운수 및 창고업	160.6(0.2)	160.6(0.0)	159.5(-0.7)	167.7(6.3)	148.5(-11.4)
숙박 및 음식점업	146.5(-1.3)	138.8(-5.3)	136.6(-1.6)	143.9(4.0)	130.0(-9.7)
정보통신업	162.7(-0.9)	162.2(-0.3)	161.8(-0.2)	174.0(9.4)	144.6(-16.9)
금융 및 보험업	159.8(-1.3)	159.3(-0.3)	157.7(-1.0)	171.3(8.3)	140.9(-17.7)
부동산업	169.4(-1.4)	167.5(-1.1)	166.3(-0.7)	175.6(6.0)	154.0(-12.3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60.3(-0.8)	158.8(-0.9)	157.5(-0.8)	169.5(8.9)	139.4(-17.8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159.8(-1.4)	158.2(-1.0)	157.5(-0.4)	167.8(7.2)	143.2(-14.7)
교육서비스업	136.1(-0.8)	135.9(-0.1)	134.1(-1.3)	140.4(6.8)	117.0(-16.7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55.3(-1.9)	150.7(-3.0)	148.3(-1.6)	158.1(6.8)	134.5(-14.9)
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150.8(-1.2)	148.2(-1.7)	145.7(-1.7)	153.0(4.4)	130.5(-14.7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160.3(-1.3)	160.3(0.0)	159.5(-0.5)	169.1(6.4)	147.1(-13.0)

주 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6건
 - －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6건)과 같은 수치임.
- 2025년 3월 조정성립률 66.7%
 - －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.0%보다 16.7%p 높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4년, 2025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25. 3.	6	6	4	1	3	2	1	1	0	0	1	66.7%
2024. 3.	6	7	3	2	1	3	1	2	0	1	4	50.0%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중재사건

- 202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
 - － 3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건)보다 1건 적은 수치임.
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.

〈표 2〉 2024년, 2025년 3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			진행 중
		소계	중재재정	행정지도	취하철회	
2025. 3.	0	0	0	0	0	0
2024. 3.	1	0	0	0	0	1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심판사건

- 202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7건
 - － 3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198건)보다 1건 적은 수치임.
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1.5%(4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78.5%(146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4년, 2025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5. 3.	197	186	36	4	103	5	19	19	720
2024. 3.	198	206	49	7	105	3	23	19	547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복수노조사건

- 202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⁾ 건수는 4건
 - －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5건)보다 1건 적은 수치임.
 - －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.0%(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100.0%(2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4년, 2025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5. 3.	4	2	0	0	2	0	0	0	6
2024. 3.	5	2	0	0	2	0	0	0	10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

◆ 인권위, 법정정년 ‘60세 → 65세’ 상향 권고

-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음.
- 인권위는 10일 “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”며 “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”라고 지적했음.
- 법정정년을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△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△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△OECD ‘2024년 한국경제보고서’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 △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△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을 들었음.
- 인권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20.3%를 넘어서고, 2050년이 되면 40%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.
-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.7%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음.
-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7.3%로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임. 65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.4세로, 법정 퇴직연령인 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함.
- 인권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정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고령자고용법)상 법정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음.
- 다만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 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음.
- 인권위는 “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정책을 시행해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”며 “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제 혜택, 금융 지원, 행정 지원,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”을 권고했음.

◆ 통계청 “66세 이상 빈곤율 OECD 최고, 자산 불평등도 확대”

- 3월 24일 통계청은 『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』를 발간했음.
- SDG(지속가능발전목표)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 목표로, 통계청은 2021년부터 매년 시계열 및 OECD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음.
-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.9%로, 2011년(18.5%)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2022년부터 정체 상태임.
-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39.8%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, 2022년 기준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(39.7%)을 기록했다.
- 여성의 정치 대표성도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 △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88년 2% → 2024년 20%로 증가했지만, △OECD 평균(34.1%)보다 14.1%p 낮았고, △지역구 여성 당선율은 14.2%에 불과했음.
-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의 당선율이 낮아, 국회 전체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.
- 공무원 내 여성 비율은 증가했으나, 관리자급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△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: 48.7%, 지방공무원: 50.4%, △국가공무원 중 행정·기술·관리운영직군 여성 비율: 전체 42.3%, 관리자급(4급 이상)은 23.2%, △지방공무원 관리자급(5급 이상) 여성 비율은 30.8%에 불과함.
- 디지털 성폭력 피해도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. △2023년 불법촬영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6.5%에 달했음.
- 자산 불평등 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 △순자산 지니계수: 2011년 0.619 → 2017년 0.584까지 하락 후, 2024년 0.612로 재상승, △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.324로, 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았음. △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13.7%p로, OECD 38개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.

◆ 서울시민 “노인 기준연령은 70.2세”

- 4월 9일 서울시는 ‘2024 서울서베이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인식, 삶의 질, 생활상,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,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.
-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민 5,000명, 외국인 2,500명, 가구원 36,280명(2만 가구)을 대상으로 진행됐음.
-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연령은 평균 70.2세로 나타났음.
- 연령별로 보면 △65세 이상 응답자는 72.3세, △65세 미만은 69.8세로, 고령자일수록 기준

- 연령을 높게 인식함.
-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에는 87.8%가 '동의'한다고 응답해,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함.
 - 걱정 은퇴 시기로는 △'65~69세'가 40.5%로 가장 많았고, △은퇴 후 걱정 월 생활비로는 '250만 원 이상' 응답이 53.3%로, △2022년(45.6%) → 2023년(47.1%) → 2024년(53.3%)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임.
 -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으로는 △취미·교양활동(78.8%)과 △소득창출 활동(70.3%)이 가장 높았으며, △손자녀 양육(33.5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.
 - 희망 동거 형태로는 △'자녀와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기'가 64.8%로 가장 많았고, △노인전용공간(실버타운·양로원 등) 22.1%, △친구와의 공동 거주 7.2%, △자녀와의 동거 4.7% 순이었음.
 - 2만 가구(가구원 36,280명)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39.3%였고, △1인 가구 평균 지속기간은 8.01년이었음. △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은 60세 이상(40.6%)이 가장 많았으며, 그 뒤로 20·30대(34.9%), 40·50대(24.5%) 순이었음.
 - 1인 가구가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△균형 잡힌 식사(4.79점), △아플 때 대처 어려움(4.71점), △가사노동(4.69점), △외로움(4.43점), △경제적 불안(4.17점) 등이 순위에 올랐음.

◆ 보건의료노조 올해 임단협도 “적정 인력”

- 4월 9일 보건의료노조(위원장 최희선)는 서울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및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음.
- 노조는 4월부터 각 의료기관에 교섭을 요구하고, 5월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7월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,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임.
- 노조는 2021년 9월 2일 복지부와 체결한 '9·2 노정합의'의 조속한 이행을 이번 투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음.
- 해당 합의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.
- 최희선 위원장은 “9·2 합의 이행과 인력 기준 마련이 올해 임단협의 핵심”이라며 “7월 총파업 승리를 통해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시켜야 한다”고 밝힘.
- 이날 확정된 대정부 요구안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됨. △9·2 노정합의 이행 및 사회적 대화 강화, 산별교섭 제도화, △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·지역·필수의료 우선 배치, △보건의료 인력 적정 기준 마련과 보건의료 인력원 설치, △주 4일제 참가 사업장 지원, △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, △공익참여 의료법인 제도화, △간호간병통합

- 서비스 전면 확대, △건강보험 보장성 80%로 상향, △의료민영화 중단 요구 포함.
-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은 보다 구체적임. △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, △진료지원간호사(PA 간호사) 제도화, △상시·지속적인 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, △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, △기본급 6.9% 인상 요구
 - 노조는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의료 확충,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을 병행할 방침임.

◆ 건설업 사망자 감소 불구, 제조업·취약업종은 증가세

- 3월 11일 고용노동부는 '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'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.
- 2024년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(553건)으로, 전년 598명(584건)보다 9명(31건) 감소했음.
-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, '법 위반 없음'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·분석됨.
- 전체 사망자 수 감소는 건설업에서 주도했음.
- 건설업에서는 272건의 사망사고로 276명이 사망해, 전년 대비 각각 25건(8.4%), 27명(8.9%) 줄었음.
- 특히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, 95명(94건)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(25건) 줄었음.
- 고용노동부는 건설경기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으며, 지난해 착공동수가 전년 대비 7.49% 줄고, 건설업 취업자도 2.31% 감소했다고 설명했다.
- 다만 2023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음.
-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예산·인력 부족 등 취약한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며, 올해 해당 현장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제조업에서는 175명(146건)이 사망해 전년 170명(165건)보다 5명(9건) 증가했음.
-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전년 74명에서 100명으로 26명(35.1%) 증가했음.
- 이는 2023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의 영향이 큼.
- 또한 조선업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늘었으며,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전년보다 12명 증가한 20명이 사망했음.
- 건설업·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는 138명(135건)이 사망해, 전년 대비 13명(13건) 증가했음.

- 건물종합관리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32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7명 늘었음.
-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음.

◆ ‘연구원 질식사’ 현대차 62개 법조항 위반 적발

- 3월 11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질식사사고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.
-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, 울산공장, 남양연구소,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음.
- 앞서 2023년 11월 19일 오후 3시 10분경,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복합환경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(챔버)에서 연구원 3명(현대차 2명, 협력업체 1명)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음.
- 감독 결과,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6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음.
- 주요 위반 내용은 △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소홀, △작업발판·이동통로 단부 등 추락방호 미설치, △기계 회전축·체인 등 위험부위에 덮개 미설치, △유해·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미게시 등임.
- 고용노동부는 이 중 40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자 입건 등 사법조치, 22개 항목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,528만 원을 부과 조치했음.
- 협력업체 길앤에스도 4개 항목에서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3,390만 원이 부과됐음.
- 다만, 사고가 발생한 챔버는 감식 작업 중이어서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됐음.
- 고용노동부는 “사고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
-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, 동일·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대차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음. △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설치 및 가스농도 자동 기록 조치, △챔버 외부 근무자가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(CCTV 등) 구축, △챔버 내·외부 근무자 간 연락 방식 개선.
- 한편 노동부는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14개소를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기획점검해, 이 중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및 권고를 실시했음.

◆ 플랜트건설 노동자 26.1% ‘근골격계 통증’ 호소

- 4월 2일 플랜트건설노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‘플랜트건설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토론회’를 개최했음.

-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음.
- 조사에 따르면 1개 부위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한 노동자는 전체의 26.1%로 나타났다.
- 1개 부위 증상 호소 비율은 6.4%, 2개 부위는 6.2%였음. 통증 부위는 허리(18.3%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△다리·무릎(16%) △어깨(14.2%) △팔·팔꿈치(11.3%) △목(10.4%) △손·손목·손가락(8.7%) 순이었음.
- 직무별로는 용접(23%), 배관(20.9%)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유증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
- 유증상자는 '중간 이상 통증'을 한 달에 1번 이상, 1주일 이상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됨.
-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2~11호 작업에 대한 노출률도 높았음.
- 해당 작업 중 2~10호 작업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최소 38.8%에서 최대 86.5%가 노출돼 있었음.
- 1호 작업(사무직)은 플랜트 특성상 조사에서 제외됐음. 가장 높은 노출 작업은 2호(86.5%)였으며, 이는 하루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상지 반복작업임.
- △5호: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작업(67.3%), △3호: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(63.7%), △10호: 분당 2회 이상 4.5kg 이상 물체 반복적 운반작업(44.6%), △9호: 하루 25회 이상 10kg 물체 드는 작업(41.6%), △8호: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 드는 작업(38.8%) 순이었음.
- 조사 결과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반복적·고강도 신체노동에 장기간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며,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함.

◆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, 21년 만 최저

- 3월 10일 고용노동부는 '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'을 발표하였음.
- '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'에 따르면,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,538만 명으로, 전년동월 대비 15만 3천 명(1.0%) 증가했음.
- 증가폭은 1월(11만 6천 명) 대비 소폭 늘었으나 2004년 이후 최소 증가폭임.
-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가입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,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 4천 명으로, 전년동월 대비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음.
- 증가폭은 지난해 10월(3만 명), 11월(2만 8천 명), 12월(2만 6천 명), 올해 1월(1만 1천 명)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.
-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고,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

- 5천 명으로,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1천 명 감소했음.
- 연령별로 보면 30대(6만 4천 명), 50대(6만 3천 명), 60세 이상(18만 6천 명)은 증가했고, 29세 이하(-10만 7천 명)와 40대(-5만 2천 명)는 감소했음.
-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,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,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,109억 원(11.5%) 늘었음.

◆ 국내 기업 60.8% “미국 관세 직·간접 영향”

-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업체 2,107곳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조사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, 응답 기업의 60.3%가 미국의 관세 인상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고 응답했음.
- 이 중 직접 영향권이라는 응답은 14%, 간접 영향권은 46.3%였으며, 무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9.1%였음.
-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 중 △부품·원자재 미국 수출기업이 24.3% △완제품 미국 수출기업 21.7% △중국·멕시코·캐나다 제외 제3국 수출 및 내수기업 17.9% △부품·원자재 미국 수출 14.2% △중국 수출 13.8% △멕시코·캐나다 수출 8.1% 순이었음.
- 업종별로는 배터리(84.6%)와 자동차·부품(81.3%)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음.
- 이 외에도 △반도체 69.6% △의료정밀 69.2% △전기장비 67.2% △기계장비 66.3% △전자·통신 65.4% 순으로 나타났음.
- 대한상의는 “미국 진출 대기업에 부품·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아 광범위한 간접 영향이 있다”고 분석했음.
- 기업들의 우려는 영향 유형에 따라 달랐음. △전체적으로는 납품 물량 감소 우려가 47.2% △수익성 악화 우려가 24%로 나타났음. △반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납품 물량 감소(25%)보다 수익성 악화(35.8%)를 더 크게 우려했음.
- 대응 방식은 주로 ‘관세 동향 모니터링’(45.5%)에 그침.
- 관세 동향 모니터링은 대기업(46.4%)과 중소기업(44.8%) 모두 유사했으나, △‘대응 계획 없음’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4.4%, 중소기업은 24.2%로 차이를 보였음.

◆ 경기도 기업 80% “근로시간 단축 동의”

- 3월 11일 경기도는 ‘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’ 결과를 발표했다.

- 해당 연구는 주 4.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, 경기도는 전날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음.
- 이번 연구는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 분석, 경기도 내 1,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음.
- 조사 결과, 임금 보전과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80%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노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임금 감소와 생산성 저하였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됐음.
- 제안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△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단축, △임금은 유지하고, 생산성과 워라벨(일과 삶의 균형) 향상 추구, △주요 모델: 주 4.5일제, 주 35시간제, 격주 4일제임.
- 경기도는 시범사업 시행 방안으로는 도내 기업 50곳을 선정해 △컨설팅, △임금 보전, △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.
- 연구진은 총 44개 측정지표를 통해 단기·중장기적 효과성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,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임.
- 제조업 등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△채용장려금 확대 △외부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방안도 제안됨.
-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~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임.
-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 4.5일제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임.

◆ 직장인 58.1% “주 4일제 도입 필요”

- 3월 11일 주4일제네트워크는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 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.1%가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,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1.9%였음.
- 법정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66.8%로 더 높게 나타났음.
- 임금수준별로도 전 구간에서 도입 찬성 비율이 높았음. 150만 원 미만 저소득층도 찬성 비율이 53.8%에 달했으며,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63.5%가 찬성했음. 다만, 1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반대 비율(46.2%)은 고소득층(36.5%)보다 높았음.
- 성별로는 여성(61.5%)이 남성(55.3%)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고, 연령대별로는 50대만 유일

- 하계 반대(53.9%)가 찬성(46.1%)보다 높게 나타났음.
- 최근 주 4일제 찬성률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 △2023년 9월 조사: 찬성 61.4%, △2024년 1월 조사: 찬성 67.3%, △2024년 8월 조사: 찬성 63.2%, △2024년 11월 조사(이번): 찬성 58.1%.
 - 반면, 연차휴가 확대와 법정 노동시간 단축,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 △연차휴가 확대(15일 → 20~25일): 찬성 75.5%, △법정노동시간 단축: 66.8%, △주당 연장근로시간 축소: 68.9%.

◆ 서울 늘봄학교 60% “전담 관리자 없다”

- 4월 9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늘봄실무사의 과중한 업무와 전담 관리자 미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.
- 지부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·특수학교 늘봄실무사 3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음.
-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609곳, 특수학교 32곳이 있으며, 학교당 실무사 1명이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조사에 참여한 셈임.
-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.3%가 ‘늘봄지원실장’ 없이 홀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음.
-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‘늘봄학교 운영방안’과 ‘운영 길라잡이’를 통해 전담 실장 배치를 예고했으나, △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실무사만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실장은 채용하지 않음.
- 업무분장 기준이 모호해 행정업무 전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- 실무사 업무는 ‘학생 안전관리 등’ 또는 ‘학교장이 정하는 업무’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조사 결과에 따르면 △61.1%는 본래 업무 외 부가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응답, △학교폭력·안전사고 관련 업무(76.7%), △시설 및 공사 계약 등 업무(41.9%), △교무실 민원 전화 응대(31.8%) 등이 있음.
- 한 실무사는 “3월 한 달 동안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”고 호소했음.
- 업무강도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음. △응답자의 98.9%가 ‘업무강도가 높다’고 응답했고, △97.2%는 ‘일이 많아 시간에 쫓겨 일한다’고 답했음.
-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는 △50~100명: 29.9%, △50명 이하: 28.5%, △200명 이상: 18.1%로, 학생 수 규모도 실무사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초과근무를 했다는 응답은 86.8%, △그중 77.9%는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응

- 답했음. △실무사 60.8%는 몸이 아파도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함.
- 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△학교별 인력 배치 기준과 △명확한 업무분장 기준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음.
 - 늘봄학교는 초등 1·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통합형 교육·돌봄프로그램으로, △기존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이며, △2025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예정이어서 업무 확장에 대비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.

◆ 서울 음식점 30.3% 키오스크 도입

- 4월 10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공동 발간한 『지역산업과 고용』에 실린 이슈 분석 ‘음식점의 키오스크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할까’에 따르면, 서울 소재 음식점의 30.3%가 키오스크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조사는 서울 음식점 2,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도입 업체당 평균 1.2대의 키오스크를 보유하고 있었음.
- 키오스크 도입 이유로는 △인건비 절감(55%), △매출 확인 및 현금 누락 방지(16.4%), △고객 대기시간 단축(13.7%), △시장 트렌드 대응(8.4%) 등이 있었음.
- 키오스크 주문 비중은 2018년 2.3%에서 2023년 24.2%로 증가했으며, △태블릿 주문기 : 0% → 4.4%, △온라인 채널 주문 : 4.1% → 11.7%, △반면 대면 주문은 89% → 56.5%로 감소함.
- 키오스크 제조업체는 1대 설치 시 인력 1.5~2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나, △키오스크는 1명의 인력 대체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는 의견이 많았음. △실질적인 인력 대체 효과는 업무 기준으로는 0.5명, 인건비 기준으로는 1명 정도로 추산됨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